

#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도·고용부·경제통상진흥원 협약... 3억600만원 투입, 10시 출근제·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가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해 강화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도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유관 사업 간 연계 △공통 홍보를 통한 신규 지원 대상 발굴 △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 지원 방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3억600만원(도비)을 투입해 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는 1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시간 근로를 단축해 오전 10시에 출근한 경우, 이를 도입한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최대 3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에는 1억6,600만원을 투입한다. 고

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도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70명에게 최대 6개월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협약 체결일인 4일부터 두 사업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www.1577-0365.or.kr)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www.jbba.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두 사업을 통해 140개 기업, 169명을 지원했으며,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을 기반으로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 2026년 해양수산 시책설명회 개최

### AC 확대·섬 닥터 도입... 지속 가능한 수산업 전환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2026 해양수산 시책설명회'를 열고 올해 해양수산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와 시군 관계자,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해양수산 중장기 비전과 2026년 실행 계획을 함께 점검했다.

설명회에서는 '수산업 미래 성장 전략 종합계획(2024년 8월 수립)'의 추진 방향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종합계획은 △청년어업인 육성 및 귀어·귀촌 활성화 △바다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증강 등 5대 전략, 17개 과제를 담고 있다. 2030년까지 해양수산업 생산액 1조 4천억 원 달성이 목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지역특화 수산물 육성, 해양환경 개선 중앙 공모사업 대응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체계 구축과 어업인 안전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근해안강망어업(참돔어)과 근해형망어업(키조개)이



총허용어획량(TAC) 시범사업에 포함되면서 자원관리 중심의 수산업정책이 본격화된다. 도는 TAC 기반 관리체계를 통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서지역 어업인을 위한 '비대면 섬 닥터'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 지역의 건강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창업과 투자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만호 기자

# 도, 자동차 부품기업 수출 애로 점검

### 미국 관세·환율 변동 등 통상 리스크 대응 현장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미국 관세, 이란 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과 현장 소통에 나섰다.

도는 4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통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수출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산화 미래첨단산업국장을 비롯해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

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미국 관세 인상과 이란 전쟁, 물류비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도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관세 대응, 수출 마케팅, 금융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에서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이상 기후와 농촌 고령화, 농작업 인력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밭농업 주산지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기상 및 생육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

# 고창,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최초 선정

### 시설·과수·노지 모두 석권... 전북 스마트농업 그랜드슬램 달성

수·관비 시스템과 병해충 예방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

다. 올해는 전국에서 5개 지역이 육성지구로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고창군이 배추와 무를 중심으로 대상지에 포함됐다.

사업 대상지는 고창군 대신면 성남

리 일원 약 500ha 규모로, 자동기상 관측시스템과 관수·관비 자동화 시설 등 스마트농업 기반이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고창군은 2027년 준공 예정인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과 연계해 고품질 배추와 무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농산물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기자

도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진안군과 김제시가 선정돼 국비 200여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도 무주군이 선정돼 30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조성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시설 스마트농업, 과수 스마트농업, 노지 스마트농업까지 아우르는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기자

# 도, 보훈회관 시설 개선·단체 지원 확대... 보훈 예우 강화

### 환경 정비·소방안전시설 보강 등 이용 편의·안전성 강화

### 보훈단체 근로자 업무수당 상향... 보훈가족 체감형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 및 시군 보훈회관 시설 개선과 보훈단체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보훈가족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북도 보훈회관 환경개선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해 주차장 활용 부지를 확대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내·외부 누수 방지 공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도 재향군인회관에는 4,800만원

을 지원해 소방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한다. 건물 내부 방화문 설치와 화장실 보수, 노후 수도배관 교체 등을 통해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안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설 개선과 함께 보훈단체 근로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광복회 전북도 지부 등 도내 10개 보훈·안보단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업무수당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보훈대상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국가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시설 환경 개선과 단체 지원 강화를 통해 보훈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호국보훈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보훈가족 기념행사 운영 등 다양한 보훈 지원 정책을 병행하며 보훈 복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도, 울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내달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신청 가능 대상은 총

4,407건이다.

신청 방식에 따라 접수 기간은 다르게 운영된다. 간편 신청은 3월 31일까지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안내를 통해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은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통합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도는 신청 대상자에 대한 문자 안내와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 단계부터 자격 검증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신청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